

민주통신

http://ilovekt.org/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
희망의 빛이 되는 민주통신이 되겠습니다.
KT 전국민주동지회

제24호 2012년 12월 발행처 | KT전국민주동지회 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0-10 TEL | 02-701-0070 FAX | 02-704-4441

‘국민기업’ KT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인권 회복을 위한 **K T 가족 선언**

[편집자 주] 18대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각 대선후보 진영과 국민들에게 통신공공성 강화와 노동인권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KT직원들과 가족성원들의 선언운동이 진행되었다. 선언의 내용과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KT직원, 가족들의 후원금을 모아 이 선언문은 12.16일자 경향신문에 의견광고로 게재되었다.

KT가 100% 민영화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시간은 KT그룹 종사원 및 국민들에게는 재앙의 시간이었습니다. 거둬진 구조조정 및 퇴출로 민영화가 시작되기 전 60,000여 명에 달하던 종사원 수가 28,000여 명(합병전KTF제외)으로 줄었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가구당 통신비는 12만 5천여 원에서 15만 4천 여 원으로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이제 OECD국가 평균의 2배가 되었습니다. 종사원 및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 소수 경영진과 주주들(특히 KT지분의 49%에 달하는 외국투자자본)은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10년간 KT의 평균 주주배당성향은 50%로 국내기업 중 1-2위를 다룹니다.

MB정권의 낙하산으로 이석재 회장이 부임한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주주배당성향은 이전

2012년 12월 16일 토요일 경향신문

kt가 완전민영화된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시간은 kt그룹 종사원 및 국민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간입니다. 거둬진 구조조정 및 퇴출로 민영화가 시작되기 전 60,000여명에 달하던 종사원 수가 28,000여명(합병전KTF제외)으로 줄었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공 주주배당성향은 50%로 국내기업은 1-2위를 다룹니다. MB정권의 낙하산으로 이석재 회장이 부임한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주주배당성향은 49%에 달하는 외국투자자본은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10년간 kt의 평균 주주배당성향은 50%로 국내기업 중 1-2위를 다룹니다.

을 0.2%의 가정사실들을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종사원 및 국민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영장은 국민기업인 KT가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는 원도 과장이 아니라도 편한합니다.

국민들의 가구당 통신비는 12만 5천여원에서 15만 4천여 원으로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이제 OECD국가 평균의 2배가 되었습니다. 종사원 및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 소수 경영진과 주주들(특히 kt지분의 49%에 달하는 외국투자자본)은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10년간 kt의 평균 주주배당성향은 50%로 국내기업 중 1-2위를 다룹니다.

- 하나 : 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KT의 재공영화 및 여타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하나 : 통신산업의 완전한 KT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없애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통신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하나 : 통신산업에서 주주에 대한 과도한 배당과 관습적인 이득분배 비효율, 양에 대한 중독투자를 강력히 억제하여 30%이상의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실현해야 합니다.
- 하나 : 구조조정과 퇴출을 막아내기 위해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노사문제에 불협화음 일삼아온 현 KT경영진은 근본적 사법적 책임을 지어 줍니다.

KT가 완전민영화된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시간은 kt그룹 종사원 및 국민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간입니다. 거둬진 구조조정 및 퇴출로 민영화가 시작되기 전 60,000여명에 달하던 종사원 수가 28,000여명(합병전KTF제외)으로 줄었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가구당 통신비는 12만 5천여원에서 15만 4천여 원으로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이제 OECD국가 평균의 2배가 되었습니다. 종사원 및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 소수 경영진과 주주들(특히 kt지분의 49%에 달하는 외국투자자본)은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10년간 kt의 평균 주주배당성향은 50%로 국내기업 중 1-2위를 다룹니다.

2012년 12월 16일

kt의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KT가족 일동

본 선언문의 취지에 동의하여 후원금을 바치신 분은 본지(12월 16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보다 더욱 높아져 2009년에는 94%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의 보수한도도 45억에서 65억으로 44%인상되었고 경영진의 보수는 123.7%나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거듭된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의 여파로 한 해 평균 20여 명의 KT재직직원이 숨지는 등 KT는 죽음의 기업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주주에게는 고배당, 경영진에게는 고연봉 등 0.1%의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종사원과 국민들에게는 희생을 감내하라는 경영을 국민기업인 KT가 선도해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저희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대선을 맞아 우리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통신 산업의 100% 민영화 정책이, 시대의 흐름인 경제민주화와 역행하는 정책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재고할 것을 대선 후보 진영과 국민들께 호소하며 중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요구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하나, 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KT의 재공영화 및 여타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 통신 산업의 말형인 KT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없애는 조치를 통해 통신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하나, 통신 산업에서 주주에 대한 과도한 배당과 편법적인 마케팅 비용 지출, 망에 대한 중복투자를 강력히 억제하여 30%이상의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나, 구조조정과 퇴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노사문제에 불법적인 개입을 일상화해온 현 KT경영진은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2년 12월 8일 KT가족선언추진위원회



KT가족선언 선포 촛불집회

‘통신공공성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KT가족선언’을 선포하는 촛불 집회가 2012.12.8(토) 18시부터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개최되었다.

김석균 민주동지회 의장의 여는 말로 시작된 이날 KT 가족선언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KT 직원을 비롯한 가족들이 참석하였으며,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킨 각 후보 진영에서도 함께 참여하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이석행 대외협력위원장(전민주노동총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이상규 의원 그리고 김소연후보 캠프 진영에서는 이호동 전해투위원장이, 김순자후보 캠프에서는 허영구 선대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통신공공성과 노동인권실현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임금삭감을 불러온 성과급제도 개악. 반드시 되돌려져야 한다!

○ ‘임금삭감’의 비밀

지난 달 말에 통과된 2012년도 임단협 결과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이 12월 5일 입금되었다. 그런데 임금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11월 까지의 누계 연봉과 12월 소급분을 합쳐봐도 작년도 11월까지의 연봉누계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1.7%의 임금인상을 따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영문일까? 비밀은 바로 ‘성과급’에 있었다. 2010년도 성과급체계 개악의 효과가 2012년도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2011년도 성과급 규모는 월기준급의 811%였다. 이 비율이 올해는 745%로 무려 66%가 삭감되어 지급되었다. 노조에서 올 임단협 해설자료로 제시한 케이티 평균연봉인 6천만원(기준급 210만원)을 기준으로 삭감금액을 따져보면 약 138만원이 된다.

○ 성과급 삭감의 의미

케이티에서 성과급은 많은 회사들이 그러하듯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기 보다는 연봉액의 일부이나, 소속 부문 등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함에도 2010년도에 회사에서 제시한 성과급 개악안을 노조에서는 아무런 단서없이 그냥 받아들인 것이다. 기존에 기본급의 600%이던 성과급 기준이

기준급(기본급의 70%)의 750%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보면 600%가 525%로 무려 75%가 삭감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노동조합에서는 기준연봉이 인상되는 게 중요하다는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 실소를 자아나게 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준이 750%이지만 실제 적용시에는 800%가 넘어 기준기준과 차이가 안나도록 되어있다는 거짓말도 늘어놓았다. 따져보면 2011년도 성과급 지급률이었던 811%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거짓말을 조합원들이 바로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착시효과도 노린 듯하다.

○ 2013년도 성과급 전망은?

노조가 합의해준 회사측의 성과급 지급률 산식을 보면 결국 전사성과급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이 전사성과급은 ‘매출성장률’과 ‘영업이익률’에 달려 있다. 올해 성과급의 기준인 750%도 안되는 745% 그친 것은 매출성장률이 0% 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낙하산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말미암아 케이티의 경영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성과급제도를 다시 되돌려 더 이상의 임금삭감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조는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

□ 2012년 성과급 규모

○ 전사성과급

구분	'11년	'12년
지급률	361%	295%
산출식	- 수익성과급 : 310% = 300% + (10-9) × 10% - 성장성과급 : 51% = 6% × 8.5	- 수익성과급 : 295% = 285% + (8-6) × 5% - 성장성과급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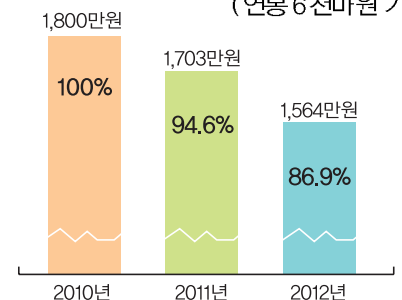
× 전사성과급 산출식

- 수익성과급 : 300% + (영업이익률 - 9%) × 10 + 6~8%일 경우 : 285% + (영업이익률 - 8%) × 5
- 성장성과급 : 매출성장률 × 8.5 + 매출성장률 0%이하 : 성장성과급 0%

○ '12년 전체 성과급 : 745% (전사 295%, 부문 300%, 팀 150%)

- '11년 전체 성과급 : 811% (전사 361%, 부문 300%, 팀 150%)

2010년 기준 성과급 규모 추세
(연봉 6천만원 기준)



2012년 대선을 바라보며 -

노동조합은 엄정중립선언!!

그러나 노동자는 노동자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유독 컸던 2012년 입단협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로마무리 되었다. ‘혹시나’ 라도 했던 것은 노동조합이 보여준 쇼를 사실로 믿었다기 보다는 현 임금 수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과 요구의 절실함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구와 기대에 아랑곳 하지 않고 혹시나하는 기



대를 단호하게 역사나로 회답해주었다. 70%대의 찬성율에서 보듯 회사 역시 평소와 다른 조합원들의 불만을 읽었는지 이번 찬반투표시 찬성목표율을 예전만큼 높게 관리하지는 않은 듯 하다.

어쨌든 이러한 결과는 현 낙하산 경영진과 어용 노동조합하에서는 조합원의 요구와 바램은 전혀 반영 혹은 실현될 수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대선에서 ‘엄정중립’ ???

현재의 노동조합 집행부가 회사의 개입과 협조에 의해 선출된 집행부라는 태생적 한계는 입, 단협에서 뿐만이 아니라 올 대선 관련 방침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주었다. 노동조합은 대선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기 노동조합의 입장과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친절하게도 현업지부장들을 통해 문자메세지로 전해주었다.

“kt 노동조합은 이번 대통령선거에 엄정중립을 유지한다. 이하 생략..” 쓴 웃음이 절로 난다. 지난 과거 군사 독재정권으로부터 빼앗겼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얻어내기 위하여 수많은 노동조합과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 및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못할 망정, 노동조합 스스로가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는 선언을 “엄정중립”이라는 정부 직속

국가기관이나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특히나 노동조합 선거에서 회사의 엄정중립이라는 기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케이티 조합원들에게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강

요할 수 있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서 이제 헛웃음만 짓게 만든다.

사실, 현 경영진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으로 내려와 그의 협조에 의해 탄생된 노동조합의 본질상 이명박 정권의 패악적 실정과 현 낙하산 경영진의 반인권, 반노동 불법, 부실경영등에 대한 비판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지 노골적으로 이명박정권의 계승자인 여당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어 차라리 노동조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 조합원들의 다른 선택과 활동을 차단하는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충정(?)을 이해 못하는바는 아니다.

KT 노동자의 선택은?

그렇다면 현 노동조합 집행부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은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까? 다수의 조합원들은 현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그의 낙하산으로 케이티에 내려와 반인권, 반노동 불법, 부실 경영으로 조합원과 케이티 가족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졌던 처절한 경험과 정치권력으로부터 경영진이 결정되는 kt 특성상 이번 대선에서 만큼은 당선 가능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로 현 낙하산 경영진 교체에 대한 강렬한 바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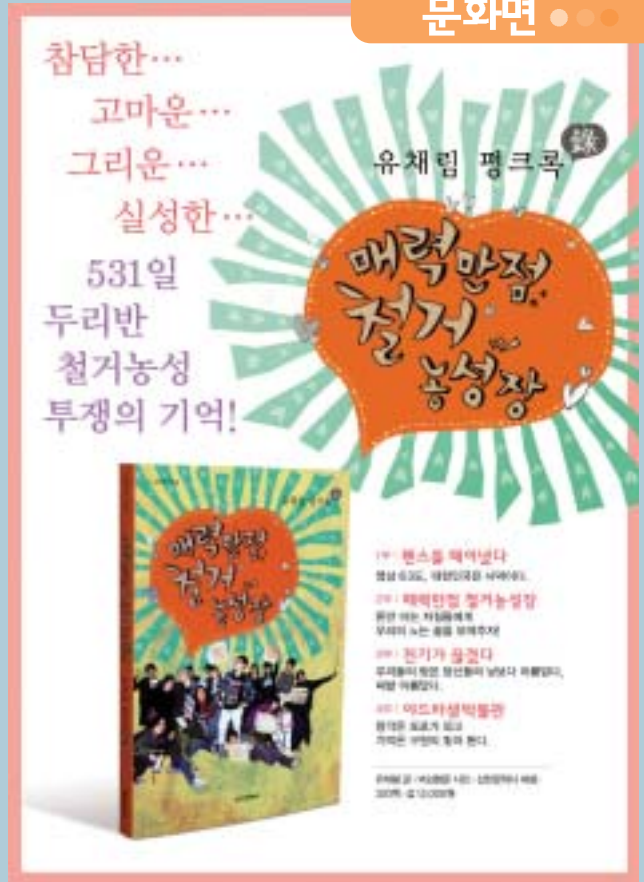


케이티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은 경쟁과 효율,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영화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이과정속에서 노동조합의 어용화와 무기력이 결합되어 그 피해가 더욱 컸던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경영진의 교체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에 따른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임금등 노동조건 악화등의 방식과 강도에서 차이가 있었을뿐 본질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중 현 이명박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고 노골적(?)이었다는 평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노조민주화라는 과제

그러므로 경영진의 일방적 경영을 견제할 있고 조합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힘있는 노동조합, 민주적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경영진은 결국 이석재 시즌2를 넘어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답게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할 때 그 폐해가 고스란히 해당노동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듯이 노동자가 노동자가 다운 정치적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그 폐해는 고스란히 케이티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KT의 통신공공성이 보다 강화되고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적어도 역사의 퇴보를 상징하는 세력의 재집권은 막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정권교체 뿐만 아니라 KT내에서도 기존 노조세력의 교체를 통해 민주노조를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교동 삼거리 일대 재개발을 둘러싸고 공권력과 거대 기업의 합작으로 서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마저 사지에 내몰린 어느 칼국숫집의 농성 이야기. 하지만 이는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고, 공권력과 국가 폭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서민과 법의 보호로부터마저 요원한 우리 사회의 생존권 존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과 문화·예술가(활동가)들이 모여 연대한 새로운 형태의 농성 방식과 그 기록들. 관의 냉소와 무관심, 더딘 문제 해결 등으로 지난한 시간이었던 반면, 용역 깡패와 기업의 외압 등으로 급박했던 531일간의 일들을 글로 꼼꼼히 기록해 그날의 사진들과 함께 일기처럼 모아 출간하였다.

이 글을 쓴 저자 유채림은 두리반 사태의 당사자이자, 중견소설가로 활동 중인 작가이다.

작가는 논픽션임에도 소설가답게 531일간의 농성을 그만의 필체와 입담으로 그 연대의 과정과 사건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묘사했다.

사막과 같은 이땅에 더 많은 두리반 같은 곳이 생기길 염원하며, 이 사회를 지탱하는 99%의 서민의 생명력과 희망의 불씨를 보여준, 작지만 의미 있는 사건을 작가의 방식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바로 그 산물이 이 책 <매력만점 철거농성장>이다.

KT노동인권백서를 발간하며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추어 2012년12월10일 KT노동인권백서가 발간되었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덩어리의 집합체인 KT는 해외투기자본으로의 수영구적 국부유출 문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자 최대기업, 민영화된 기업임에도 MB정권에서 투하되는 낙하산인사들의 특권과 전횡, 비밀퇴출프로그램(CP)에 의한 비인간적 인권침해, 노동자들의 폭증하는 사망자 문제까지 이루 해아릴 수 없다.

이런 사업장이라면 적어도 매년 노동인권백서가 발간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부 주체들의 문제의식 부족과 불철저한 실천활동의

반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 기간 KT노동자들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묻혀 버렸으며,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총 812쪽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피눈물들의 일부 분만을 담을 수 밖에 없었다. 그 만큼 아픔과 고통의 기간이 길었으며 깊은 상처들이 많았다는 의미이다.

○ KT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를 찾아서

어쩌면 현재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상황의 뿌리는 미국의 초국적 투기자본이 초과이윤 확보를 목표로 87년부터 통신개방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89년 노태우 정부가 이에 굴복하여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미 예고된 것이고, 93년부터 시작된 정부지분 매각이 2002년 5월 잔여지분 완전 매각으로 10년동안 완료됨으로써 수탈체계가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배당을 위한 인력구조조정이 엄청난 흑자를 내면서 지속되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견제세력인 노동조합에 대한 무력화를 동반하면서 추진되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은 일상화되었으며 노조 무력화는 내부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낙하산 인사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과 전횡으로 귀결되었다.

○ CP비밀퇴출프로그램

매년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으로 포장된 정리해고를 통해 6만명이 넘는 직원수를 절반인 3만명으로 감축시켰으며 빈자리 3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짐으로서 민영화의 결과는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요인 중의 하나로 되었고, 단기실적에 집착하는 경영진은 합법적인 정리해고가 불가능하게 되자 결국 2006년부터 CP비밀퇴출프로그램까지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무급휴일근로 연차



휴가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발되었고, 이는 사망자 폭증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문제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중심에 바로 CP비밀퇴출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있다.



반인권적으로 시행된 CP비밀퇴출프로그램은 2008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문건이 폭로되었고 두차례의 양심선언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고용노동부는 2012년9월 CP퇴출프로그램 운영을 처음 인정하였다.

CP비밀퇴출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퇴출시킨다는 의미에서 보면 기업의 책임을 사회에 전가시킨다는 1차적 의미가 있으며 노동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측면에서도 반사회적이다. 감시와 따돌림 그리고 차별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CP비밀퇴출프로그램은 강요된 침묵속에 내부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을 후퇴시켜 왔다.

우리사회가KT에서 벌어지고 있는 CP비밀퇴출프로그램을 그대로 용인하거나 묵인한다면 기업들은 까다로운 정리하고 보다 간편한 CP비밀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력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정리해고가 도입된 시점은 신자유주의가 위세를 떨치던 IMF 시기였고, 부당해고 처벌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된 시점은 2007년7월1일자 부터이다. 묘하게도 CP비밀퇴출프로그램이 한창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반인권적인 퇴출프로그램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맹위를 떨치게 되었다.

CP비밀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내부민주주의 확립과 통신공공성의 회복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에 대한 처벌조항이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

○ 인권백서 발간의 의미

이 보고서는 KT민영화 10년을 총 결산하고 평가하는 의미로 작성되었으며 초국적 자본의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해외민영화가 어떻게 추진되었고 노동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떠한지를 구체적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해외투기자본과 담합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경영진(낙하산 포함)들의 절대권력 형성과정과 노조무력화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 보았다. 특히 비밀퇴출프로그램의 도입과 노동인권탄압 실태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 발표를 통해 통신이 더 이상 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성과보편적 서비스 그리고 기본적인 노동인권 실현이 절박하게 필요함을 호소할 것이며, 연대 단위 노동자들에게는 KT노동인권백서 발간을 계기로 KT와 같은 노조무력화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단결 투쟁의 반면교사가 되게 하고, 내부 노동자들에게는 노예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직장을 민주화시키고 인간다운 KT를 새롭게 만들고 열어 나갈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로 백서는 KT가족이라면 누구든지 KT노동인권센터(02-701-0070, 010-3310-5677)로 신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소식보고

지난 10.19일부터 시작되었던 ‘낙하산인사 척결과해고자복지, 통신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12월 14일 9주차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kt에 필요한 과제들을 국민과 대선후보 진영에게 제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된 이번 촛불집회는 그동안 궂은 날씨와 추위에도 불구하고 민주동지회 회원들의 열성어린 참여로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힘차게 진행되어왔다. 민주동지회는 촛불집회에 모아졌던 의지를 가지고 대선 이후에도 해당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나가기로 다짐하고 있다.

